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429>

JCCT 2022-11-52

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opting job Guarantee System as Expanding Universal Welfare: Focusing upon the Case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김미경*, 김신영**

Mi-Kyong Kim*,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 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어 : 기본소득, 일자리보장제, 청년 일자리,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

Abstract We analyzed both current local policies and in-depth survey data to find out a way to provide job opportunity and income source to local young people in so-called job guarantee system. The young generation in current Korea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both growth without employment and severe economic inequality at the same time, though they should have taken part actively in social development. Their rights for work and survival have also been threatened and losing hope for the future is an widespread symptom in this generation. Kwangju metropolitan city(KMC) has been supporting certain amount of case income and job experience to young people in Kwangju through a local government policy called Kwangju Young Generation Job Experience Dream Service. In spite of high level of satisfaction from the participants, limitations such as below average job performance level of participants and a barrier in the transition to regular position still remain. This study hopes that a case of Kwangju gives pragmatic insights for a realizable path to expanding universal welfare through assuring job opportunity to the young generation in local area.

Key words : Job Guarantee System, Universal Welfare, Kwangju Metropolitan City

*정회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제1저자)
**정회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October 13, 2022 / Revised: October 26,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Hanyang Cyber University, Dept of Silver Industry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지자체형 ‘일자리보장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미래를 잃은 2030 청년세대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지자체형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모색하고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노동연계형 정책으로는 ‘일자리 보장제’를 들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란 일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구상”[1]에서 나온 정책이기에 노동연계가 없는 기본소득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저항이 되고 있는 ‘노동 비연계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의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보장제’ 도입방안의 검토를 위해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경제적 대안으로 이윤보다는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 주창자인 파블리나 R 체르베나는 “모든 실업자를 수용할 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일거리 자체가 감소한 적은 없었으며 다만 이윤을 낳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자발적 시민활동을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으로 수용하여 확장한다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3]. 2021년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연구에서도 지역 자원활동가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확인되었다 [4]. 일자리 보장제 연구의 핵심은 2030 청년세대의 자발적 자원활동을 생활임금을 통해 보장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며, 그 정책적 효과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그리고 단기 일자리창출에 주로 치중되어 있던 기존의 일자리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①. 일자리보장제는 “민간 부문을 정부가 중재하던 기존의 일자리정책과 달리 정부가 고용자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일자리보장제를 언제 받아들이고 그만둘지에 대한 선택을 청년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점이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일자리보장제가 기본소득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공급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지자체가 더 적합한 이유는 지역 사회 내 사회서비스 및 돌봄에 대한 수요현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일자리보장제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및 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거쳐 수행된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밝힌 후 본문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일자리 보장제의 개념적 기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계속해서 이 연구의 핵심 사례인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을 개괄한 후 청년 일자리 보장 정책 도입을 주제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청년활동가 및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일자리보장제

관련 연구에 [5, 1] 따르면 일자리보장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GDP의 1~1.5%로^②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국내 실업자를 대상으로 계측한 내용을 볼 때도 명목 GDP의 1.2%로 추정하고 있다 [6]. 일자리보장제 대상을 2030 청년세대로 제한한다면 그보다 낮은 예산으로 실행가능하며, 따라서 지자체형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일자리보장제가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수당제보다 더 현실적이며, 일자리보장제의 대상을 2030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욱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들은 일자리보장제를 그린뉴딜과 결합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체르베나는 일자리보장제에 시민참여와 사회적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은 빈곤, 교육, 돌봄, 주거, 환경 등의 지역문제들을 장기간

다루며 시 행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회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체르네바는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감염병 대응 재원을 마련한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주택, 의료보험, 녹색경제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답한다 [2] [3]. 이처럼 ‘일자리보장제’는 노동, 경제정책을 넘어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태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 대응전략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와 ‘참여소득’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결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7, 8].

2. 사례 분석: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

광주광역시 일자리 직접지원 사업은 12개, 간접지원 사업은 17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간접지원 사업에는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에서부터 교통비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취업활동 보조사업, 금융복지까지 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들의 청년 신규채용 사업 중에는 지자체 지원 이후 청년채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됨으로써 청년일자리 지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게다가 일반적인 구인구직의 청년들에서부터 문화예술계통의 청년들과 청년농부까지 청년층을 다양하게 포괄하여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9, 10].

다만 이와 동시에 간접지원 사업이 직접지원 사업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지원 사업은 인건비나 실업부조, 구직수당, 창업지원금과 같은 현금지급도 하지만 주거와 사무실, 공간임대과 같은 현물지급도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보증인이 되어 사업자금 융통과 같은 저리의 보증제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현금과 현물, 금융까지 포함한 직접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직접지원 12개 사업 중 창업지원 사업이 5개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창업지원 사업들은 제품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해 창업이라는 실질적인 결과까지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 이후 이를 유지 및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창업사업들은 창업유치 및 활성화 이후 이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후관리 사업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직접지원 사업 중 마을청년 활동가의 인건비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노동공급이 필요한 기업과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을 매칭 시켜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자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일자리의 최종 고용주가 되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광역시가 최종 고용주가 되어 청년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직접지원 사업이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청년일자리 직접지원 사업에는 장기적인 고용의 유지를 보장하는 사업이 부족하다. 간접지원 사업 중에는 2년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조건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눈에 띈다. 하지만 직접지원 사업 중에서는 다년간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정책수요 조사 결과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청년활동가,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문TFT와 정책수요TFT를 구분하여 일자리보장에 대한 의견,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보장제 도입이 가능한 사업영역, 지자체 역할 및 성인직적 시각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정책자문TFT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점으로는 첫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비교해 일자리보장제는 취업을 위한 경험(시간·노력)과 취업을 연계 제공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 주도하에 일자리 발굴이 관건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공공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환경 시스템(사회적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치실현의 구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청년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전환 또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이다. 다섯째, 일자리보장제의 일자리영역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 지역적 수요나 필요가 높은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아래 일자리사업 기관을 통한 사업영역 및 사업구조화가 지역형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관건이라는 점이다.

정책수요 TFT에서는 첫째로, 청년에게는 삶의 가치(관)를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기간 동안 생활보장과 청년 간 네트워크, 청년 중간지원조직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수요가 파악되었다. 둘째로, 청년세대 일자리보장제가 기존의 일경험이나 소득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청년 지원책을 통합·개편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점, 청년세대가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일자리 세팅과

소득보장을 통한 청년세대의 직업안정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보장제는 가치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적합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과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일자리보장제 설계는 사회적경제 유형과 업종, 분야, 근로자 특성 등을 반영한 운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넷째로, 일자리보장제는 가치있는 일거리와 사업시스템, 네트워크와 경험을 청년에게 자산으로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로, 청년지원사업의 한계와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청년 스스로 일과 삶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보장제가 세팅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년을 정책수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일자리보장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청년 인재육성이며, 이를 위해 청년에게 시간과 생활보장을 투자하는 것이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가 지향하는 방향임을 공감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두 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III. 논 의

문헌검토 및 수요조사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청년대상 지원 사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2030대의 결혼, 임신, 출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과 문화가 요구된다.

2021년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중 20~39세 청년은 총 387,661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239,000명으로 파악된다. 취업자를 제외한 20~39세 인구는 148,661명이다. 학업이나 군입대 등을 제외하고 10만 명을 일자리보장제 지원 대상으로 볼 때, 2021년 생활임금 2,198,680원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추계해볼 수 있다. 물론 2030 청년대상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공익활동의 성격을 가진 가족 친화적, 환경 친화적 마을기업 일자리로 그 대상자를 제한하는 '부분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할 때 예산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표 1. 광주광역시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사업(안)
Table 1. Policy Summary for Youth Job Guarantee System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대상	지역에 정주를 희망하는 2030 청년세대 구직자	
지원 목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일자리와 소득보장 취업경험, 고용보장, 실질소득 보장, 사회공익활동을 통한 가치 경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청년의 무형 자산 축적 일자리 시스템 경험, 네트워크 형성, 일의 가치 경험 등 </div>
지원기관	광주상생일자리재단+광주사회서비스원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보장제 참여기업에 청년 고용 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통한 일과 사회적가치 경험 기회 제공 여성가족친화마을의 사회적경제 연계에 청년 고용 동별영역에서 지역단위 커뮤니티(마을)의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영역 확장 및 제로에이스트 사업 확산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분야 창업 공적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보장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 등 공적활동영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 	
보장 내용	<사회적경제에 지원하는 청년> * 최대 5년 지원(직업훈련교육 기간 포함) - 2-3년 고용보장 후 고용승계(상호 선택) - 중도 퇴사 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직업훈련교육으로 연계 - 광주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금 + 부족분은 지자체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주> * 최대 2년 일자리지원금 부족분 지원, 3년차-5년차 간접노무비 지원 - 2-3년 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부담하고 시 사업참여 제한 패널리 적용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분야 창업하는 청년> *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 창업 기간 최대 2년간 광주시 생활임금 기준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중 창업지원 교육 및 창업지원금 사업 참여 - 지원기간 종료 후 창업 결과 여부에 따라 취업지원 또는 직업훈련교육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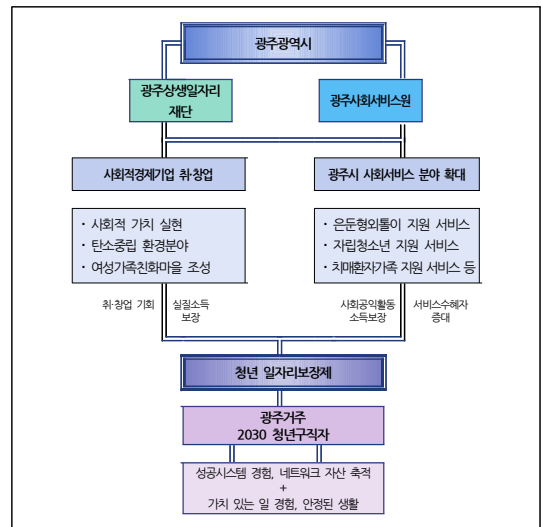


그림 1.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
Figure 1. Policy Road Map for Youth Job Guarantee System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돌봄서비스의 공익성 제고를 목표로 2018년 9월 설립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역시 기존의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하여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 2030 청년 ‘일자리보장제’ 사업부를 두고 2~3년정도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2030 청년세대들이 환경·가족친화적인 공익사업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험 등을 통해 직업능력 및 경험을 쌓도록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협업체계를 갖추으로써 자기주도적인 공익적 성격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는 표 1 및 그림 1과 같은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IV. 결 론

자신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아야 하는 2030 청년세대들에게 조건 없이 무엇이든 맡길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일할 기회조차 상실한 오늘날 우리 청년세대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제공하되 그 결과물은 이윤보다는 공익성에 둘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및 코로나 대책에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포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35세 이하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훈련, 실습보장 패키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대선후보는 “job for all”이라는 구호로 연방정부 일자리보장 정책을 간판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또한 미국의 많은 환경단체에서는 일자리보장제를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사회적 투자와 인프라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은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으로 만 30세 이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부투자를 요구하였다.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국가는 일자리 공급주체로서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기회를 상실한 2030 청년세대에게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References

- [1] Chun Yongbok & Park Wonik., “The Economic Effects of Job Guarantee System: Simulation Results Analysys, *Critical Social Policy*”, 75(2): 95-136, 2022.
- [2] Tcherneva, P.R., “The Case for Labor Demand Targeting”, *Journal of Economic Issues*, 45(2): 401-409, 2011.
- [3] Tcherneva, P.R., “Permanent On-The-Spot Job Creation - The Missing Keynes Plan for Full Employment and Economic Transformation” *Review of Social Economy*, 70(1): 57-80, 2012.
- [4] Kim Mi-Kyong et al.,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Basic Income Policy in Kwangju for the Work-Labor Balance, Kwangju Women Family Foundation. 2021.
- [5] Lee Seungyoon, Paik Seungho.,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come”, *Citizens and World*, vol.39, pp.129-168, 2021.
- [6] Park Gaboon, What is The Job Guarantee System for All Citizens?,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7>, 2020.
- [7] K.Y. Cho, The Effects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Labor Supply. Korea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17.
- [8] Lee Sangjoon., “A Temporary Policy Suggestion for Promoting Empolymnt of Young Generation: Job Guarantee System for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THE HRD REVIEW* 21(2), 134-151, 2019.
- [9] Kwangju Chonnam Research Institute, Kwangju Chonnam Policy Brief, 2020.
- [10] Kwangju Chonnam Research Institute, Monthly Kwangju Chonnam Economy Trends, 2022.

Endnote

- ① 청년층을 포함한 중·장년층, 여성 등, 모든 연령대와 인구집단을 위한 일자리정책으로 훈련, 인턴, 창업, 고용보조금, 시간제 일자리 등의 일자리 정책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한 [10]에 따르면 직업 훈련정책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광주광역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9년 기준 4조 1,519억여만원으로 1.2%는 4,982억 3천5백만 원이다.